

지역 명소 청춘 빛포차 ‘양성화 핫구호’…1년 넘게 ‘제자리’

무허가운영 속 적치물·쓰레기불편 여전
공원·도로 혼재에 허가 기준 적용 난항
식품위생법상 시설 충족 여부도 걸림돌
특별시 “상인들과 소통…결론 어려워”
오영순 남구의원 “적극 방안 모색 필요”

“아침마다 여기 앞이 아주 그냥 쓰레기장입니다. 어떻게든 관리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해요.”
지난달 29일 오후 9시께 찾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춘 빛포차 광장. 도로를 따라 늘어선 포장마차마다 불이 켜지고 50여명의 손님들로 북적였다. 상인들은 수레 위에 식재료와 조리도구를 펼쳐 음식을 만들었고, 술잔을 기울이는 손님들의 대화소리와 고기 굽는 연기·냄새가 뒤섞였다.
영업 공간 주변에는 주류 상자와 수레 등 각종 비품이 놓여 있었으며 일부 이용객은 쓰레기를 거리에 버리거나 고성방가를 하기도 했다.
다음날 오전 다시 찾은 광장에는 전날 영업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쓰레기를 봉투에 모아 정리한 상인들도 있었지만 휴지와 빈 음료수병 등



지난달 2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동에 조성된 ‘청춘 빛포차 광장’에서 포장마차 상인들이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이 일부 방치돼 있었고, 수레와 연탄, 빈 병 상자 등은 인근 빛고을시민문화관 앞에 적치돼 있었다.
광장 일대는 1970년대부터 무허가 포장마차가 운영되며 지역 대표 먹거리 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도로 무단점용과 위생·소음 등의 민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전남광주특별시는 지난해 포장마차의 장기적인 양성화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광장을 조성했지만 주민 불편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빛고을시민문화관 관계자는 “문화행사를 보

러 온 시민들이 입구에서 어질러진 비품과 쓰레기를 마주하면 어떤 기분이겠느냐”며 “부지 전체가 문화관 소유도 아니어서 행정 조치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하루빨리 해결책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포장마차가 여전히 ‘무허가 운영’ 형태에 머물면서 야간 영업 준수사항이나 쓰레기 처리, 영업물품 보관 등을 규정할 별도의 운영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상인들도 제도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4

0여년간 포장마차에서 닭발 등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유모(64)씨는 “위생관리는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광장 조성 과정에서 주차장이 사라져 마차와 조리도구를 둘 곳이 마땅치 않다”며 “적정한 이용료를 내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영업하면서 물품 보관 장소까지 마련된다면 서로의 불편도 줄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성화에는 법적·행정적 걸림돌이 적지 않다. 현행 도로법상 도로관리청 허가를 통해 노점 운영이 가능하지만 광장 일대는 공원과 도로가

혼재돼 있어 일률적인 적용이 어렵다. 이에 더해 식품위생법상 필요한 시설과 구조물을 갖추기도 쉽지 않다는 게 전남광주특별시의 설명이다.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도로가 2차선에 불과해 필요한 시설을 모두 설치하고 점용을 허가하면 도로 기능이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상인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방안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오영순 남구의원은 “광장을 조성하면서 기존에 포장마차 영업 차량이나 물품을 두던 공간은 사라졌는데 정작 이를 대신할 보관 공간은 마련되지 않아 수레와 연탄, 장비 등이 주변 공공기관 앞 등으로 밀려나는 문제가 생겼다”며 “그렇다고 수십 년 동안 상인들이 생계수단으로 운영해 온 포장마차를 강제로 철거하는 것도 현실적인 해법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장마차를 관광자원처럼 활용하면서 법적·행정적으로는 계속 무허가 상태로 두는 것은 모순”이라며 “상인들도 합법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다른 지역에서 포장마차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관리한 사례를 살펴보고 합법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형우 기자

초기 수사인력 확보…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변수’

중수·공소청오늘 동시 출범

광주중수청 인력 140명…정원 58%
경찰 경력·계급 반영 미흡 채용 난항
공소청, 90일 유예 이후 조직 재편

검찰의 중대범죄 직접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과 수사 기능을 떠난 광주광역·지방공소청이 2일 동시 출범한다.
1일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 등에 따르면 광주중수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흥동 한경빌딩에 청사를 마련하고 개청을 위한 시설 정비를 진행했다. 청사는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로 1~3층에 직원 사무실과 중수청 장실, 회의실 등이 들어선다.
1청장·1차장·3국·10과·4담당관 체제로 운영되는 광주중수청은 광주·전북·제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외폭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다만 중수청 출범 인원이 정원인 240명 중 140명으로 58.3%에 그치면서 수사 인력을 충분



개청을 하루 앞둔 1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흥동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 앞에서 관계자들이 개청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히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역 경찰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사와 검찰 수사관 일부가 중수청 지원 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경찰 내부에서도 경감·경정급 수사 간부들을 중심으로 향후 예정된 경력경쟁채용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사 출신은 법조 경력 등에 따라 1~4급 상당으로 임용되는 반면, 경

찰은 경위와 경감 모두 6급으로 임용돼 기존 계급과 경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초기 수사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함께 출범하는 공소청은 직접 수사 기능을 내려놓고 기소와 공소유지 중심으로 조직이 재편된다.
광주고등·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정문기 등에 설치된 현판을 각각 ‘광주광역공소청’과

‘광주지방공소청’으로 교체했다.
초대 지휘부와 주요 보직 인사도 확정됐다. 광주광역공소청은 고경순 현 광주고검장이, 광주지방공소청은 김중우 현 광주지검장이 각각 초대 청장을 맡는다.
광주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장에는 이유현 부장검사가, 여성·아동범죄전담부장에 서혜선, 공공·형사부장에 황진아, 중대범죄기소부장에 정성현, 공판·송무부장에 정우성 부장검사가 배치됐다. 순천지청 형사2부장에는 임은정 부장검사가 보임됐다.
광주지방공소청은 중수청 이직자와 사직자를 제외한 기존 인원으로 잔류하는 형태로 우선 출발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에서는 검사 1~2명과 수사관 50~60여명이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조직 개편은 90일간의 보완수사 유예기간이 끝난 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검이 현재 보유한 사건만 6천여건에 달하는 만큼 공소청은 출범 직후 새 공소업무와 기존 사건 정리를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청 본청과 광주·전남경찰청 또한 최근 일선 수사부서 관리자와 실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현장 교육을 잇따라 개최하는 등 형소법 개정 관련 주요 변경 사항을 공유하며 실무 대응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사업장 변경하려면 700만원”

이주노동자에 금품 요구 논란

목포의 한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 변경을 조건으로 1인당 700만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광주 지역 노동·사회단체들은 1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장 변경을 빌미로 이주노동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목포의 한 사업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국적 노동자 2명은 지난 8월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위해 사업주에게 관련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이들은 외국인등록증 발급 기한을 앞둔 8월17일 하루 동안 조업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업주로부터 사업장을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속소의 전기와 가스까지 차단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동자들은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같은 달 19일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 조건으로 각각 700만원을 요구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8월24일 목포지청에 외국인등록증 발급 방해와 속소 전기·가스 차단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윤창용 기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그린 알로에